

축산과학원 '08년도 낙농과 연구과제 수행 중 간평가 실시

축산과학원 낙농과(과장 김현섭)은 2008년도 시험연구과제 중간 점검단계로 23개의 과제를 심의위원 6명(강원대 박춘근교수, 경상대 이성실 교수, 세바시온 목장 대표 나영수, 우성사료 손근남 이사, 농협 안성목장장 남인식, 누보비앤티 연구소장 김현수)을 초빙하여 지난 7월 11일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과제 수행상 문제점과 개선점을 심의했다.

6명의 외부 심의위원들은 연구원들이 수행한 과제 중 특히 '젖소의 무인인공수정시스템'의 소 체온 감지, 분석, 알림이(발표자: 박성재 박사)와 자동승가 검출기(발표자: 박수봉 박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개발완료 후 농가 활용을 당부하였으며, 젖소농가의 로봇 자동착유시스템(AMS)의 실태조사(발표자: 정영훈 박사)로 설치 농가 및 운용기술에 관한 농가지도자료의 조속한 결과 도출을 주문했다.

나영수 위원도 현장의 생생함이 담긴 조언을 주었으며, 외부 위원들 중 박춘근 교수, 손근남 이사, 남인식 위원들은 젖소사양표준설정(주담당: 이현준 박사), 총체보리 급여효과(주담당: 백광수 박사), 축우 전용 TMR 개발(주담당: 기광석 박사), 메탄가스 저감 기술(주담당: 이왕식 박사), 기능우유 생산 기술(주담당: 김상범 박사) 등 연구결과에 대한 조속한 농가활용 및 산업기술화에 대한 당부를 하였으며, 연말평가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약속하면서 안병석 축산자원개발부장의 마무리 인사로 성황리에 중간평가를 종료했다.

하절기 부정·불량축산물 특별단속 실시

여름철을 맞아 하절기 부정·불량축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8월 4일부터 29일까지 총 4주간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고 부패·변질되기 쉬운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협동으로 특별위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아이스크림, 우유, 양념육류 등을 취급하는 유가공업소나 식육가공업소, 우유류판매업소, 식육판매업소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보존과 유통상의 냉장이나 냉동 온도의 유지 등 기준을 제대로 준수했나의 여부와 원료 사용의 적합성,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취급여부, 표시사항의 적법성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변질 우려 축산물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장관에 장태평씨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장태평 전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내정했다.

장 내정자는 1949년 3월 전남 무안 출생으로 경기고(69), 서울대 사회학과(79), 동 행정대학원(79), 미국 오리건대 대학원 경제학과(93) 졸업했다.

그는 제20회 행정고시에 합격, 당진 부군수실에서 공직을 시작. 경제기획원 장관비서관, 소비자정책과장, 재산세제과장,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등을 지냈다. '04. 1~'05. 8월까지 당시 농림부 농업정책국장(농업구조정책국장)직을 수행한 바 있으며, 이후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차관급, '06.10~'08.2)을 역임했다.

그는 농림부 재직시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119조원 투용자계획을 마무리했고, 신용·경제사업간 분리 등 농협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농협개혁 작업을 주도(농업협동조합법 개정)했으며 농지은행제도와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과 농업 인력 육성사업 체계화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 경영체 육성을 위해 각종 세제 지원, 제도 정비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장 내정자는 업무 스타일이 합리적이며 무리 없이 일을 추진하면서도 소신을 강단있게 밀어붙인다는 평을 듣고 있다.

대형음식점들 원산지 표시제 정착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대형 음식점을 중심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월 24일 300㎡이상 대형 음식점 1938곳을 대상으로 2차 쇠고기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중 1.4%인 28개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차 합동단속시 위반율 10.7%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적발된 업소는 원산지 허위표시 4개소, 원산지 또는 식육종류 미 표시 6개소,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18개 업소 등이며 이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및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 조치 등이 취해질 방침이다.

소에게 들풀 급여

사료값 급등에 따른 경영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에서는 지난 7월 24일 이상수 농림수산식품부 자원순환팀장, 박치봉 농협중앙회상무, 남길우 양평축협조합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존자원 활용을 위한 들풀 베기' 행사가 열렸다.

이날 양평축협에서는 하천부지와 도로변 등지에

서 자생하는 풀을 베 가축에게 급여하기 위한 '들풀 이용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농협중앙회는 들풀 이용 지원센터를 전국 지역 축협과 낙협 127곳에 설치키로 했으며, 지역축협 등이 지자체와 연계해 하천부지 등의 풀을 적극 이용토록 하는 한편 침수피해가 없고 기계화 작업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사료 작물을 직접 재배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또 공항관리공사와 도로공사측과 협의를 통해 공항 녹지에서 회수되는 경관작물과 고속도로변 수거 풀을 축산공가에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도 최근 대전시 하천 둔치 미관정비작업 중 수거된 유채와 잡풀 155톤을 축산농가에 제공하고 대천축협과 연계해 하천부지를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 사례를 각 시·도에 전파키로 했다.

농협축산경제대표 남성우씨 선출

남성우 전 농협유통사장이 지난 7월 18일 농협축산경제대표 선거에서 축협조합장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농협축산경제대표에 선출됐다.

이날 선거는 축산경제조합장대표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천과 찬반투표를 거쳤으며 단일 추천된 남 대표는 찬성 19표를 얻어 임기 2년의 농협축산경제대표이사가 됐다.

신임 남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농협 축산경제의 조직정비와 현장중심의 경영, 회원조합과의 사업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해나가면서 강한 농협축산경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부문 467억 적자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부문이 올 상반기에 농협사료 등의 영업실적 부진으로 467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 농축산소식

지난 7월 23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2·4분기 종합심사분석보고회의 자료에 따르면 축산경제부문의 6월말 현재 당기순손실은 467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1억원보다 186억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당기순손실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농협사료와 농협목우촌 등을 포함한 영업외 손익의 감소가 컸고 공통관리비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 당기순이익은 당초 계획보다 적자폭이 472억원 늘어 952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농협 축산경제는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계열사 경영관리를 강화하고 매출확대와 원가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부문별 수지보전대책을 중점 시행키로 했다.

돈육선물 거래 '스타트'

돈육선물이 지난 7월 21일 부산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상장 기념식을 갖고 드디어 일반인들을 맞았다. 기념식 현장에는 주요 관계자를 비롯해 200여명이 참석, 국내 첫 축산업계 상품선물인 돈육선물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NH투자선물에 따르면 이날 하루 돈육선물 8월물에 대한 거래량은 125계약으로 현물로 따지면 12만 5000kg, 거래금액은 5억원을 기록했다. 기본예탁금은 18억원으로 집계됐다.

축산물등급판정소, "경영 조직역량 강화" 다짐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연말까지 돼지 냉도체 판정률을 8%대까지 끌어올리고 연내 소 200만마리를 전산등록키로 하는 등 경영성과와 역량강화에 나서 주목된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지난 3일 제2회 이사회에 이어 지난 7월 18일 간부워크숍을 통해 이 같은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의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경영의 핵심인 냉도체 판정률을 지난해 2.4%에서 연말까지 8.0%까지 높이기로 했고 지난해 73만 2000마리의 실적을 낸 소 전산등록은 연내 200만 마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DNA 동일성검사는 지난해 7530건에서 연말까지 1만건을 검사키로 했다.

계란과 닭고기 판정물량도 각각 지난해 2억8500만개와 900만마리에서 올해 3억8000만개와 1800만마리를 목표로 정했다.

특히 신규사업에 대한 수수료 비율을 지난해 8.4%에서 10.0%까지 높이는 한편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85%수준까지 올려 고객가치경영을 확립키로 했다.

'소 쇠고기 이력추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올해 말부터 태어나는 모든 소에 귀표가 부착되며 귀표가 없는 소는 양도나 양수, 도축을 할 수 없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21일 공포된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우선 소의 소유자 등은 소가 출생 및 폐사, 수입 및 수출, 양돈 및 양수할 경우 30일 안에 지역 축협 등 대행기관에 '소의 출생등 신고서'를 서면이나 전화로 신고해야 한다. 대행기관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개체식별대장에 기록관리하며 30일 안에 농가를 방문해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를 달아줘야 한다.

대행기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

의 구청장이 각 지역별로 1~2개 기관·단체를 지정해 추진하며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지역축협이나 브랜드경영체, 한우협회 등 144여개 축산 관련 단체가 지정됐다.

법이 시행되면 귀표가 없거나 훼손돼 개체식별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소는 사고 파는 것은 물론 수출, 도축도 할 수 없게 된다.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신청 받았을 때 귀표부착이나 개체식별대장등록여부 등을 확인한 이후 도축해야 하며 도축처리 결과를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곧바로 기록해야 한다. 도축한 이후에는 해당 소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지육에 표시해 판매하거나 반출해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도 각각 개체식별번호가 다른 고기를 섞어서 가공할 수 없고 포장처리실적으로 개체식별대장에 입력하거나 5일 이내에 장부에 자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또 가공한 부분육 또는 포장육마다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다수의 개체를 한 포장지에 묶어 판매할 경우에 20마리 이내에 개체식별번호를 대표하는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갈비나 세절육 등을 50마리까지 가능토록 했다. 이 경우 하나의 포장지에 포함된 모든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묶음번호 구성 내역서에 기재해 보관토록했다.

이와 함께 식육판매업자는 포장지나 부분육마다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거나 식육표시판에 기재해야 하며 각기 다른 개체식별쇠고기와 섞이지 않도록 구분·포장해 판매해야 하고 판매한 실적을 날짜별로 거래내역서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이 같은 신고, 표시, 기록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제정안은 올해 12월 22일부터 시행되며 도축·가공·판매 등 유통단계의 이력추적제 의무사항

은 내년 6월 22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하림, 대상그룹 축산물 가공 사료부문 인수

하림이 대상그룹의 축산물 가공과 사료사업 부문을 인수했다.

하림은 이에 따라 돼지고기 브랜드육 시장과 사료시장에서 선두위치를 점유하게 됐다.

하림은 지난 7월 10일 자사의 계열사인 제일곡산이 대상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팜스코 주식 1988만 3888주(65.12%)를 인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림은 이에 따라 제일곡산, 제일사료, 천하제일사료, 선진 사료부문 등에 이어 대상팜스코의 사료부문까지 추가, 사료업계의 선두를 달리게 됐다.

또 지난해 9월 또 다른 계열사인 농수산홈쇼핑을 통해 선진의 '크린포크'를 인수한데 이어 대상팜스코의 '하이포크'까지 인수함에 따라 돈육 브랜드 1위업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쇠고기 교역 중단되나 축산업계 관심집중

미국에서 3번째 BSE(소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 의심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조사결과에 축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보다 쇠고기 청문회 등에서 지적됐던 '미국에서 BSE 발생시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이냐'이다. 경영난이 심각한 가운데 농가들의 여론은 즉각적인 수입중단을 주장하며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할 것이며, 오랜 전통 끝에 수입재개를 결정한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미지수다.

축산농가들은 물론 국민과 약속한 정부와 수입을 서두르고 있는 수입업자들까지 이 미국 환자의 검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료출처 : 축산신문, 농수축산신문, 라이브뉴스〉